

#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vs 흥종학 “매출을 늘려야”

## 최저임금 논란

### “5인미만 사업장 구체적 대안 마련해달라” “돈이 돌아야 경제 살아” 경기 부양에 주력

소상공인들은 17일 흥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흥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다.

흥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흥 장관에게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 본질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연합회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소상공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 이상 12.2% 늘어났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임금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은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흥 장관은 “문제인정부

의 제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팽팽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보다는 경기부양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를 향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각차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확인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순중 한국부동산협회장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최저임금과 임대차, 불공정거래 등 3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문제로만 다루면 안 된다”며 “불공정문제로 다루다보니 범주의 오류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요청했다.

이근재 한국의식업중앙회장도 “경기 부양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며 소상공인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들을 것을 호소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위원회에 소상공인 50%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동욱 한국영상문화산업협회장은 “돈이 돌기 전에 서민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변에 빈 상가들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흥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흥 장관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돈이 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가 안 맞는 문제,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흥 장관은 최저임금 이외의 다른 건의 등에 대해서는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휴수당 문

제 등과 관련해 법원의 판례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대해 흥 장관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좋은 내용이니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왜 항상 뒤늦게 찾아오느냐는 일부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기 좋은 시점이지 노력하겠다는 고 밝혔다.

김영신 중기부 대변인은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느낌으로 박수 치고 끝났다.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 점주들은 ‘폭탄돌리기’...편의점 본사만 배 불린다

### 점포 매출 2.4% 늘 동안 업계 성장률은 10%대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난에 못이겨 장사를 접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하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는 점포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가맹본사와 계약기한을 다 채우고 장사를 접는 계약종료 편의점의 갯수는 한해 100여개에 불과했다.

반면 ‘계약해지’는 두배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명변경’은 4배에 육박했다.

계약종료는 본사와 가맹계약 기한을 모두 채우고 장사는 접는 편의점을 말한다. 계약해지는 계약기한이 남았음에도 장사를 접는 경우다. 명변경의 경우 편의점은 그대로 운영되지만,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다. 본사가 상가 임대비용을 부담하는 편의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자세히 보면 CU의 경우 2017년 144개 점포가 CU에서 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두배에 약간 못 미치는 226개였고, 명의를 변경한 편의점은 921개였다. 2017년 CU는 1804개의 신규점포를 열어 1만746개로 점포를 확대했다.

GS25도 비슷한 추세다. 2017년 계약종료는 233개, 계약해지 96개, 명변경은 1063개였다. 2017년 GS25는 1740개의 점포를 신규로 열어 총 1만604개 점포를 확보했

다. 반면 편의점 업종의 성장률은 2016년 18.4%, 2017년 13.4%에 달했다. 또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점포를 크게 웃돌았다. GS리테일의 2017년 영업이익은 2.90%, 자기자본순이익률 14.24%에 달했다. CU의 경우 BGF리테일에서 분할되기 직전 년도인 2016년 영업이익이 4.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점포들이 근접출점과 최저임금 인상 압력 등의 문제로 장사를 접는 중에도 본사의 수익은 계속 유지되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편의점주는 망해도 본사는 계속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이다.

뉴스시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